

한국체육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

일부개정 2023. 3. 7. 규정 제886호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인 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’ 22.10.17.)*에 따라,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운영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재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 개입을 방지

* 근거: 교육부 국립대 학정책과-5474(2022.10.11.) 「국립대학 재정위원회 관련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안내」

- 재정위원회 회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, 당사자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, 해당 위원이 스스로 심의·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※ 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 일부개정안

제7조(재정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8조에 따른 재정위원회(이하 “재정위원회”라 한다)의 일 반직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·회계규정으로 정한다.

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이 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0. 17.>

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 <신설 2022. 10. 17.>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④ 당사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10. 17.>

1.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2.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⑤ 재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안전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. <신설 2022. 10. 17.>

⑥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해야 하며,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10. 17.>

2. 주요내용

- 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, 당사자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, 해당 위원이 스스로 심의·의결을 회피하도록 함(안 제7조의2)

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

※ (참고) 타 국립대 규정: 공주대학교 재정·회계 규정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불 임: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한국체육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문

한국체육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재정위원회 위원의 제척, 기피, 회피) ① 재정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 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② 당사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1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2.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③ 재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해야 하며,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부 칙(제886호, 2023. 3. 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7조의2(재정위원회 위원의 제척, 기피, 회피) ① 재정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</u> <u>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</u> <u>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</u> <u>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</u> <p><u>② 당사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 <u>2.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</u> <p><u>③ 재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u></p> <p><u>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해야 하며,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</u></p>
	<p>부 칙(제886호, 2023. 3. 7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